

동향분석 보고서

모심의 눈 살림의 길 15호

2017. 02

종합진단

전환의 새 길 찾기,
각자도생에서
협동을 통한 공존공생으로

경제·생활 | 농업·먹거리 | 정치·환경

종합진단

전환의 새 길 찾기, 각자도생에서 협동을 통한 공존공생으로 _ 3

경제·생활

[세계경제 흐름]

- 세계 경제는 장기적인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_ 11
- 2017년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 _ 11
- 주요 국가들의 경제관련 전망 _ 12
- 경제와 밀접한 2017년 국제 유가 전망은 엇갈리고 있다 _ 15

[한국경제 전망]

- 2017년 한국경제는 지속적인 저성장 추세 속에서, 추가 하락 가능성도 있다 _ 15
- 2017년 한국경제는 안팎의 불안 요인 증대로 상당한 도전을 받을 전망이다 _ 16
- 시민들 생활과 밀접한 경제 영역의 어려움이 주요 지표로 확인되고 있다 _ 18
- 고령화와 함께 1인가구, 맞벌이 가구 증가로 ‘돌봄’이 중요한 사회 의제가 되었다 _ 19
- 저성장 시대에 맞는 체질개선 노력으로 새로운 생존 전략을 마련할 때다 _ 20
-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_ 20
- 생협 공제 관련 동향 _ 22
- 협동조합 관련 동향 _ 22

농업·먹거리

- 2017년 세계 곡물생산량과 곡물가는 상대적으로 안정 기조를 보일 전망이다 _ 24
- 2016년 어려운 한 해를 보낸 한국 농업의 2017년 전망은 여전히 밝지 않다 _ 24
- 안정적인 식량지급을 위한 농업의 역할에 비해 국내 농업의 지속가능성은 점점 약해지고 있다 _ 25
- 농산물 개방의 확대 속에 국내산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는 여전히 높은 편이다 _ 26
- 경기침체 속에 1인가구와 맞벌이 가구 증가로 소비생활과 먹거리 이용 패턴이 변하고 있다 _ 27
- ‘건강’과 ‘먹거리’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으나, 생활양식의 변화로 나아가지는 못하고 있다 _ 30
- 트럼프 정부의 보호주의 강화 조치는 한국 농업에 다양한 형태로 영향을 줄 전망이다 _ 31

정치·환경

- 한반도를 둘러싼 혼란스러운 국제정세 속에서 정치적 리더십의 공백이 우려된다 _ 32
-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탄핵을 넘어 탈핵 사회로 전환이 필요하다 _ 33
- 국민의 알권리와 건강 보호 취지를 살려 GMO 표시제를 재개정할 필요가 있다 _ 34
- 기후변화가 점점 심각해지는 가운데 세계 기후협약 시스템은 오히려 불안정해지고 있다 _ 36

전환의 새 길 찾기, 각자도생各自圖生에서 협동을 통한 공존공생共存共生으로

- 위기의 징후들이 사회 전 영역으로 확산되면서 파국적 미래를 경고하고 있다

- 자본주의 성장 경제가 한계를 드러내고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가운데, 경제적 격차 확대가 사회 전반의 양극화로 이어지고 있고, 미래를 저당抵當 잡는 부채는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 기후변화와 생태계 파괴, 자연자원 고갈, 환경성 질병의 확산 등으로 환경 재난의 발생 빈도가 점점 높아지면서 미래세대의 생존과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
- 핵무기를 앞세운 북한의 돌출적 행동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초강대국 미국과 중국이 힘의 대결을 펼침으로써 한반도 정세의 불확실성과 안보의 불안감이 여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 불안정하고 차별적인 일자리로 불안해하는 사람들, 심지어 일할 기회조차 잃어버린 사람들이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일자리를 잠식하는 로봇과 인공지능의 발달로 노동의 미래가 매우 불확실해지고 있다.
- 생존경쟁에 대한 압박은 갈수록 커지고 패자부활의 기회는 점점 사라지는 가운데, 가족과 사회의 친밀 관계는 빠르게 해체되고 있고, 이념과 계층, 세대를 아울러 삶에 대한 위기감은 점점 커지고 있다.¹⁾
- 이런 가운데 기득권의 세습화로 인한 불공정한 현실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우리나라가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로 ‘공정성’을 들고 있는 점은 현실의 불공정성을 역설적으로 말해주고 있다.²⁾

1) 20대는 일자리, 30대는 주거와 결혼, 40대는 자녀 양육과 교육, 50대 이후는 노후준비 문제 등 세대별로 각기 다른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음.

2) 2016년 7월 전국 성인남녀 2천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대한민국이 추구해야 할 가치로 ‘공정성’(49.4%)을 가장 강조했으며, 이어서 ‘안전’(43.3%), ‘이해와 배려’(40.0%), ‘정의’(35.0%), ‘평

- 하지만 국가 운영의 핵심 주체들은 사회 전역으로 확산되는 위기적 현상들에 대해 책임 있는 역할을 해내지 못하고 오히려 불신과 갈등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국가 권력의 핵심을 둘러싸고 벌어진 상식을 초월하는 편법과 부정, 부패 스캔들은 온 나라를 충격에 빠지게 했다. ‘국정농단’ 사건이 밖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지 몇 달이 지났지만 문제의 당사자들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 이번 사태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권력과 자본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과 재벌 총수가 오히려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강변하는 참담한 상황에서 시민들은 ‘도대체 이게 나라냐?’라고 되묻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 대개조大改造라는 말도 나왔지만 현실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국가 운영의 핵심 주체들이 보여준 ‘무능력’과 ‘무책임’도 문제이지만, 국민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를 닫은 ‘무감각’이야말로 참으로 심각하고 불행한 일이다.

－ 촛불로 나타난 민심民心과 이들이 만들어 낸 새로운 변화에 주목하자

- 부패하고 무능하고 오만하기까지 한 대리인代理人들에게 더 이상 자신들의 삶과 미래를 맡길 수 없다고 자각한 시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광장에 모여서 촛불을 들었다. 사실 정치적 대리인들에 대한 변화의 요구는 지난 20대 총선에서 이미 확인되었으나, 정부와 여당은 꿈쩍도 않았고 야당 또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그러다가 대통령과 측근 세력의 국정농단 사태를 계기로 국민들의 실망감과 분노가 광화문 촛불로 나타나 전국으로 확산되었고, 연 인원 1천만 명을 훨씬 넘는 시민들이 수개월째 촛불 집회를 이어오고 있다.
- 변화를 바라는 민심이 압축적으로 표출된 촛불 집회는 2002년 미선·효순양 사고를 계기로 시작된 후,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반대와 2008년 수입쇠고기 반대 집회까지 그동안 몇 차례 있었다.
- 그런데 이번 광화문 촛불은 예전과 비교해 새로운 변화들이 확인되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촛불 민심은 강고했던 집권 여당의 분열과 함께 정치 지형을 크게 바꿔놓았다.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이 의결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 결과에 따라 대선

등’(30.0%), ‘정직’(26.4%), ‘민주’(25.8%), ‘공동체의식’(18.2%), ‘평화’(13.9%), ‘치유’(12.0%)의 순으로 답함(중복응답 포함). 최인수 외, 2016, 『2017 대한민국 트렌드』, 한국경제신문, 298쪽.

일정도 앞당겨질 전망이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정치적 지각변동이 이번 촛불을 계기로 일어나고 있다.

- 또한 이번 광화문 촛불은 오랜 세월 금기의 영역으로 남아있던 ‘박정희 신화’와 삼성을 비롯한 ‘재벌의 성역’, 정치적으로 양분화된 ‘지역주의 구도’에 커다란 균열을 만들어냈다. 제도적 절차에 따른 대의제 민주주의의 취약성과 소위 ‘공공의 이익’을 다루는 우리 사회 관료 조직의 부끄러운 속살도 여지없이 드러났다.
- 특히 이번 촛불에서 주목할 부분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광장을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 학습과 함께 ‘의식의 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세대나 계층, 지역의 경계를 넘어 한 사람 한 사람의 자발적 참여로 광장의 촛불을 만들어 냈고, ‘세월호 세대’인 청소년들이 발언의 주체로 등장한 점도 새롭다. 스스로없이 자신의 주장을 표현하면서도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들과의 충돌을 자제하면서 광장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고자 했고, 집회 후 거리 청소를 하는 모습 등은 시민들이 더 이상 동원의 대상이 아니라 광장의 당당한 주인이라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다.
- 이런 의식의 진화야말로 이번 촛불이 만들어 낸 가장 소중한 성과이자 사회 변화의 진정한 힘이다. 여기에는 스마트폰과 SNS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나누면서 집단적 지혜를 만들어가는 소통 환경의 변화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 물론 이번 촛불의 긍정적인 가능성에 대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상황이 녹록치 않은 것도 사실이다. 최근 들어 광장에 참여하는 시민들을 진보와 보수의 이념적 잣대로 갈라놓고, 노골적으로 폄하하거나 이용 또는 편승하려는 움직임들이 대선 정국과 맞물려 복잡하게 나타나고 있다. 모처럼 열린 시민정치의 광장이 입장을 달리하는 사람들 간의 세력 대결 또는 힘겨루기의 무대로 전락하고, 광장에서 표출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참가자 규모로 의미를 평가하려는 경향들도 나타나고 있다.
- 이렇게 되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절실한 소망은 소홀히 다뤄질 수밖에 없고, 출구를 찾지 못한 분노와 절망감은 사회 전반의 갈등과 피로감을 증폭시킬 수도 있다. 미국처럼 우리도 대선 이후 사회가 더욱 분열되는 등 상당한 후유증에 시달림으로써 위기 극복의 골든타임golden time을 놓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다.

- ‘권력 교체’를 넘어 ‘새로운 나라 만들기’를 향한 전환의 계기를 만들어나갈 때다

- 2017년은 87년 민주화운동 30년이 되는 해다. 87년 민주화가 야권의 분열로 미완의 상태에서 제도적 절차의 수준에 머물렀다면, 이번에는 촛불에서 확인된 시민의 힘과 지혜를 바탕으로 광장에서 골목으로, 생활 속으로, 나아가 의식의 성숙과 내면화까지 민주주의를 더욱 심화하고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 ‘대통령 직선제’로 상징되는 중앙권력의 민주화 과제는 이제 정치 영역을 넘어 경제와 교육, 문화, 환경, 돌봄, 농업, 먹거리 등 삶의 영역 전반으로 확장되어가야 한다. 특히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를 넘어 농민과 여성, 청(소)년과 말 못하는 자연생태계의 권리까지 민주적으로 반영시키기 위한 노력은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최근 비례대표제 확대와 선거권을 18세로 낮추기 위한 논의가 등장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 이런 점에서 2017년 한 해를 뒤흔들 탄핵과 대선, 개헌은 ‘정치권력의 교체’ 차원을 넘어서 권력 작동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통해 ‘새로운 나라로의 전환’을 이끌어내는 차원에서 그 방향과 의미가 다뤄질 필요가 있다.
- 권력은 주로 ‘사람’의 지위와 영향력을 통해 직접 행사되거나, ‘제도’를 통해 사람들의 행동을 규율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따라서 사람을 갈아치우거나 제도를 바꾸는 일은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 중요한 과제다. 올해 우리 사회의 주요 현안인 ‘탄핵’과 ‘대선’이 전자에 가깝다면 ‘개헌’은 후자에 해당한다.
- 그런데, 사람을 통해 직접 행사되는 권력보다 기준과 절차에 따라 작동하는 제도를 통한 권력은 훨씬 포괄적이고 지속적이다.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인물 교체에 그치지 않고 제도적 틀이 바뀌어야 한다. 특히 재벌, 언론, 관료, 검찰 등 선출되지 않은 권력 집단이 공공의 영역을 장악해 자원의 흐름과 분배 구조를 왜곡하면서 스스로 기득권 이익집단이 되어버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틀이 바뀌어야 한다. 또한 이들을 견제, 감시해야 할 정치권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대의제와 대리인 정치에 대한 불신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해결의 주체이자 당사자로 직접참여 할 수 있는 기회와 공간을 확장하는 것도 제도 개선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 하지만 사람의 교체나 제도의 개선만으로 보다 본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 사람의 교체와 제도 개선을 통한 변화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데 필요한 일이나, 소위 ‘정상’으로 당연하게 인식되어 온 영역에 대한 성찰

과 전환을 이끌어내기는 어렵다. 권력의 본질적인 전환을 위해서는 정치혁명과 제도혁명을 넘어 의식혁명으로 확장해야 한다. 권력은 ‘이념과 가치’를 통해 사람들의 의식체계에 영향을 주면서 집단사고^{group thinking}의 형태로 더욱 은밀하게 지속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 이런 심층적인 권력은 강제적이기보다는 유혹적이어서 자발적 선택에 따른 복종의 형태로 그 모습을 드러낸다.³⁾ 신자유주의 시대에 자본이 작동하는 방식이 그 대표적인 예로, 오늘날 생산과 소비, 노동과 휴식, 치유의 영역까지 우리의 삶 전체에 자본의 논리가 깊숙이 침투해 들어와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 고속성장, 고도성장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은 성장의 임계^{臨界} 상황에서 국가총량적 성장 지표가 국민 개개인의 행복을 보장해준다는 믿음이 이미 무너졌음에도, 이번 대선의 유력 주자들이 공공연히 ‘성장’을 공약의 핵심 키워드로 삼는 것은,⁴⁾ 성찰을 가로막고 편향된 인식을 강화하는 집단사고의 함정에 빠진 우리 사회의 단면이다.
- 빠르고 복잡한 변화와 함께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지금의 시대는 기존의 경험과 지식, 가치가 미래로 나아가는 디딤돌이기보다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새로운 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익숙한 것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자기중심적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서, 낯선 것을 용기 있게 받아들여 인식의 지평을 확장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각자도생으로 인한 공멸의 길에서 벗어나기 위한 리더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자본이 주도하는 경쟁의 자유는 결국 사람들을 ‘각자도생’^{各自圖生}의 길로 내몰아 삶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데, 이런 경향은 성장경제가 한계를 맞으면서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 삶에 대한 불안감은 커지는데 삶의 기본 영역을 지켜주는 보호막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 사활을 건 경쟁 속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채 믿고 의지할 곳을 잃은 사람들은 자기 착취를 통해 삶의 에너지를 소진하거나 누군가를 향한 분노와 증오를 표

3) 한병철의 책 『피로사회』(2012, 문학과지성사)와 『투명사회』(2014, 문학과지성사) 참고.

4) 국민성장(문재인), 공정성장(안철수), 뉴딜성장(이재명), 혁신성장(유승민) 등 진보, 보수를 아울러 유력 대선 주자들이 공통적으로 ‘성장’을 이번 대선공약의 핵심 키워드로 내세우고 있음.

출하게 된다. 자살자와 정신질환자가 늘어나고, 불특정 다수를 향한 혐오범죄와 갈등이 증폭되는 현상은 각자도생으로 인한 불안사회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 하지만 분노의 에너지로는 새로운 사회를 열어가기 어렵다. 분노는 짧은 호흡과 좁은 안목, 성급한 판단을 불러 일으켜 위험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 불확실성을 단숨에 해결할 강력한 메시아적 지도자에 대한 기대 심리도 여기에 해당한다.
- 문제는 각자도생을 부추기는 현상이 개인은 물론 사회와 국가 전반에서 발견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미-중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남-북 갈등과 남-남 갈등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각자도생이 독자 생존은커녕 ‘공멸’이라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다 줄 가능성이 높다. 편협한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공존과 공생을 위한 새로운 길을 찾아내야 한다.
- 이 점에서 지나친 위기감이나 근거 없는 낙관론 보다는 시대를 내다보는 통찰력으로 미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해가는 역량과 책임성을 갖춘 리더십이 필요하다.⁵⁾ 서로 다른 입장과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공동의 목표를 향해 뜻을 모으고 부담과 책임을 함께 나누면서 서로를 살리는 방향으로 새로운 차원을 열어가는 용기 있는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리더십이 있을 때 위기 극복을 통한 전환의 계기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 지금 시대의 리더십은 진정성을 가지고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가진 것을 내어놓으면서 자기 혁신의 모범을 보일 때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단체나 조직, 집단속에 묻혀있는 익명의 개인들이 아니라 살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체적인 삶에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면서, 스스로 먼저 그 한 사람이 되어 ‘나부터 실천’하는 노력을 통해, 각자가 스스로 주체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가까이서 살피고 돕고 함께 하는 리더십의 역할이 중요한 때다.

- 공존공생의 길을 열어가는 협동운동의 역할을 더욱 심화, 발전시켜 나가자

- 각자도생을 넘어 공존공생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협동운동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사회적 환경변화를 읽어내고 운동적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협동

5) 올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제 47회 다보스 포럼에서 ‘소통과 책임의 리더십’(Responsive and Responsible Leadership)을 핵심 주제로 선정한 것도 리더십의 중요성을 확인시켜 주고 있음.

운동의 실천 방향과 방식들을 마련해나가야 한다.

-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권익 실현과 필요 충족이라는 협동운동의 전통적인 역할을 하면서도 그것을 넘어서는 필요가 있다. 어려운 경제 현실에서 일자리 창출과 생활의 필요를 협동적으로 해결하는 일은 중요하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과 시장의 상업적 논리가 협동조합,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영역으로까지 침투해 들어오는 상황에서, 이윤과 경쟁을 내세운 자본주의 시장경제와는 다른 가치와 방식으로 작동하는 대안적인 경제모델을 만들고 안착시켜내는 일이야말로 오늘날 협동운동이 담당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자 과제다.
- 새로운 30년을 향한 한살림의 운동적 전망도 여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성격이 서로 다른 결사체와 사업체로 구성된 협동조직을 통해 생산(자)과 소비(자) 영역의 협력 시스템을 만들어 온 한살림운동의 정체성을 살리면서 저성장 시대가 만들어내는 거대한 도전을 지혜롭게 극복해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 한살림을 포함한 한국 생협들은 한국 자본주의 경제의 성장기와 궤를 같이하면서 성장해 왔는데, 성장경제가 한계를 드러내는 상황에서 사업과 경영 전반에서 적지 않은 영향을 받고 있다. 그 결과 운동을 펼치기 위해 조직을 만들었는데 어느 순간 조직을 유지하고 운영하는 데 상당한 에너지를 투입해야 하는 상황을 공통적으로 맞고 있다.
- 저성장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생협들은 조직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일정 수준 마진을 확보해야 하고, 그러려면 물품가격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경기침체와 소득 감소로 가격 민감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소비가 위축될 수 있어, 선택이 쉽지 않은 딜레마 상황을 맞게 된다.
- 따라서 조합원 자산을 지켜내기 위한 효율적 운영 노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운동적인 전망을 분명히 해서 성장경제 시절에 형성된 체질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 시대는 ‘결핍’ 보다는 ‘과잉’에 따른 문제가 심각하다.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 ‘다이어트’를 하듯이, 무엇을 새로 만들고 채우는 노력 못지않게 무엇을 하지 않고 무엇을 버릴 것인가에 대한 현명한 판단도 중요한 때다. 한살림 역시 문턱을 낮추고 문을 활짝 열고 가진 것을 내어놓고 함께 나누는 노력이 필요하다.
- 한살림운동은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나누는 활동에 머물지 않는다. 생명의 먹거리가 지속가능하게 생산되도록 밥상과 농업을 살리고, 땅과 물, 자연생태계를 살

리는 노력들을 함께 펼쳐왔으며, 나아가 생산과 소비의 분리와 함께 경쟁과 이윤의 논리로 작동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와는 다른 대안적인 경제모델을 도농 직거래에 기반한 협의적 가격 시스템을 통해 만들어 왔다.

· 이제 한살림은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대 환경의 변화에 맞게 먹거리를 넘어 삶의 전 영역으로 한살림운동의 영역을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다. 돌봄과 교육, 문화, 에너지, 생활기술 등 삶의 자립과 자치를 이루는 다양한 활동들을 단계별로 확장해 나가자.

· 이 점에서 한살림 선언에 담긴 ‘생명의 세계관 확립을 통한 새로운 생활양식 창조’의 의미도 적극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살림의 가치를 내면화하는 성찰과 숙고의 ‘시간’을 통해 생명의 세계관을 확립하고, 소진된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재생, 재충전하는 ‘공간’을 통해 새로운 생활양식을 창조해 나감으로써, 결국에는 삶에 대한 불안감으로 지친 몸과 마음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삶의 의지처(依止處)이자 안식처(安息處)를 각 지역과 영역별로 다양하게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를 각자도생에서 공존공생의 방향으로 전환해가는 실마리 역시 농촌과 도시를 아울러 다양한 대안인 삶의 공간들을 만들어 냄으로써 사회적 회복탄력성(resilience)을 높여가는 가운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세계 경제 흐름

- 세계 경제는 장기적인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는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2010년 성장률이 5.4%이던 것이 2015년 3.2%, 2016년 3.1% 수준으로 계속 낮아지고 있음.
- 2017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선진국 2%대, 신흥국 4%대로, 전체로는 3.0%~3.4%대로 전망됨. 국내 경제기관 전망: LG경제연구원 3.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3.4%, 현대경제연구원 3.4%.⁶⁾
- 하지만 2017년 세계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 요인이 상당히 커서 저성장의 폭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음.

- 2017년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

- 2017년 세계 경제의 주요 변수로, ‘초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갈등 격화’, ‘브렉시트Brexite(Britain + exit) 영향으로 인한 유럽경제의 불확실성’, ‘일본 아베 정부 경제정책Abenomics의 한계 노출’, ‘중국의 부동산 경기 급락과 내수 위축으로 인한 성장률 하락’ 등을 들 수 있음.
- 여기에다 소득격차 확대와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소비 둔화, 정치·경제적 불안정으로 인한 투자 위축,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자원 수출국의 성장 둔화, 저출산-고령화 확대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 고용 불안정과 노동생산성 저하 등 다양한 요인들이 성장의 위기를 부추기고 있음.
- 한편, 2017년 1월에 열린 세계경제포럼Davos Forum에서는 올해 세계에 영향을 미칠 주요 요인들로 ‘제4차 산업혁명’, ‘성장둔화와 불확실성 증대’, ‘보호무역주의와

6) LG경제연구원, 2016, <2017년 경제전망>(2016. 1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6, “2017년 세계경제 전망”, <오늘의 세계경제>, 16권 33호; 현대경제연구원, 2016, “2017년 한국 경제 수정 전망”, <경제주평>, 725호, 9쪽.

포퓰리즘 확산', '기후변화와 난민, 테러, 대량살상무기 등 글로벌 리스크 증대'를 제시함.

- 주요 국가들의 경제관련 전망

1) 미국

- 소비 둔화와 투자 감소에 따른 저성장 국면 속에서 미국의 2017년 성장률은 1.8% 수준으로, 2016년(1.5%)보다 미약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물론 자국 이익을 우선하는 트럼프 정부의 정책 결과에 따라 미국 경제 성장률은 전망치보다 더 높아질 수도 있으나, 트럼프의 정책 노선을 둘러싼 국내외 갈등의 전개 양상에 따라 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음.
- 트럼프 정부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 Make America Great again는 구호와 함께 미국 경제 재건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강도 높은 처방을 내릴 전망이다. 특히 미국의 일자리 감소와 소득 불평등의 원인이 무역자유화에 있다고 보고, 미국 이익을 우선한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할 전망이다.
- 세계경제의 1/3을 차지하는 미국이 TPP 탈퇴, NAFTA, FTA 재협상을 추진할 경우, 글로벌 교역의 감소 등으로 세계 경제의 침체 상황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도 상당한 부담을 안을 전망이다.
- 한편 미국이 금융에 대한 규제완화와 함께 금리인상을 단행할 경우,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과 함께 세계 경제의 리스크도 더 높아질 수 있음.⁷⁾ 이 경우 우리나라도 외국인 투자 자금의 급격한 유출과 환율 및 주가의 급변동으로 실물경제가 악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음.
- 이 외에도 트럼프 정부의 전통 에너지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 조치가 기후변화 협약을 무력화 시킬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이민자 배제 정책의 강력한 추진으로 인종과 민족, 국가 간 갈등도 증폭될 경우 경제적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음.
- 우리의 경우 사드 배치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증액, 한·미 FTA 재협상 요구 등 미국의 정책이 구체적으로 진행될 경우 한미 간 갈등과 이를 둘러싼 남남 갈등이

7) 미국은 올해 3차례 금리인상 단행을 예고한 바 있음.

격화되어 경제적 침체 상황과 연결될 우려도 있음.

2) 중국

- 2010년 전까지 10% 이상의 고속성장을 보인 중국 역시 저성장 기조로 접어들면서, 2017년 경제성장률은 2016년 6.7%보다 소폭 하락한 6.4%~6.5%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
- 중국 정부는 경제의 경착륙을 막기 위해 재정지출 및 인프라 투자 확대, 부실기업 정리와 국유기업 합병, 과잉생산의 감축 등의 노력을 펼쳐 왔으나, 기업과 지방정부 부채 확대와 투자 및 수출 부진, 부동산 과열 등으로 성장이 정체될 가능성이 높음.
- 이런 가운데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위안화가 약세가 되어 대규모 자본 유출이 일어날 경우 중국 경제는 상당한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 중국 정부는 주요 수출대상국인 미국과 유럽의 경기침체와 수요 부진에 따른 영향을 고려하여, 기존의 투자·수출·제조업 중심의 경제에서 소비·내수·서비스업 위주의 경제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음.
-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노동집약적 수출과 원자재 수입에 의존한 경제 구조를 내수 중심으로 바꾸고,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수입 부품을 국산화해 수출 시장을 확대하고 있음. 이런 중국의 경제정책 변화는 대중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경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한편, 시진핑 정부는 2020년까지 모든 국민이 중산층 수준의 생활을 영위하는 ‘샤오캉사회’ 小康社会 실현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한 바 있는데,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농업·농촌·농민 등 삼농三農 문제의 해결이 핵심 과제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음.

3) 일본

- 일본은 엔화 약세를 바탕으로 생산과 수출의 증대와 소비의 회복세에 힘입어, 2017년 경제 성장률을 작년 1.3%보다 상향한 1.5%로 예상하고 있음.
- 하지만 전체적으로 일본 경제가 예전의 성장 기조를 되찾을 것을 기대하기는 무리가 있음. 인구감소와 고령화 확대, 전체 고용 인구수의 1/3 이상을 차지하는 비정

규직 비율 등 구조적인 문제가 큰데다,⁸⁾ 물가 하락과 기업 실적의 악화로 임금을 개선할 여지가 별로 없어 소비 침체가 계속 이어짐으로써, 아베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한계를 드러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음.

- 이런 가운데 정치, 경제, 군사, 외교적으로 미국과 밀착 노선을 취해 온 일본으로서 미국 트럼프 정부의 등장은 일본경제 전반에 양날의 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 긍정적인 측면으로 트럼프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미국 경기가 살아나고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이루어질 자본재를 비롯한 일본의 수출이 증가하고, 미국의 금리 인상과 엔화 약세가 지속될 경우 수출 기업의 수익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 한편, 부정적인 측면으로,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가 유럽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의 보호무역주의를 연쇄적으로 자극할 경우, 대외 의존성이 높은 일본의 경기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특히 미국과 중국의 통상마찰이 격화될 경우 미국의 반덤핑 조치에 중국뿐 아니라 일본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으며, 멕시코에 진출한 일본 자동차 기업의 미국 현지 투자 요구 압력도 커질 전망이다.

4) 유로존

- 2017년 유로존 경제는 1.4% 수준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외부적으로 주요 교역국인 미국과 중국의 경제 상황이 수출 부진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내부적으로는 영국의 EU 탈퇴, 즉 브렉시트Brexist의 여파가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 주변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EU 전체의 경제적 불안정성을 높이고 있음
- 난민, 테러문제로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EU 체제에 비판적인 극우정당들의 등장과 정치적 보수화 경향도 확대되고 있음. 저성장과 높은 실업률, 소득 불평등 확대 등에 따른 경제적 불안감이 기존 정치체제에 대한 실망과 분노로 확산되는 것은 세계적인 현상으로, 트럼프의 당선처럼 외국인,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 등 극우세력의 포퓰리즘 정치가 확산되고 있음.

8) 현재 비정규 노동자는 일본 전체 노동자의 약 40%를 차지하는데, 정직원 임금을 100으로 했을 때 비정규직 임금은 63.9에 불과해, 일본 경제의 소비 활성화 차원에서 임금격차해소가 주요 과제로 등장하고 있음.

- 특히 2017년에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 EU 주요국들의 선거가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反EU, 反이민, 고립주의를 내세우는 포퓰리즘 성향의 정당들(독일(AfD), 프랑스(FN), 이태리(M5S) 등)의 영향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정치적 불안정성에 따른 투자와 소비, 고용의 침체가 이어질 가능성이 큼.

- 한편, 경제와 밀접한 2017년 국제 유가_{油價} 전망은 엇갈리고 있다

· 하락세 전망

- 2017년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는 원유 공급과잉 상태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연평균 배럴당 약 50달러 수준을 유지하는 등 저유가 기조가 지속될 전망.
- 전통 에너지산업에 대한 규제 철폐와 생산 확대를 지향하는 트럼프의 에너지 정책으로 국제유가 하락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음.

· 상승세 전망

- OPEC 국가와 러시아 등 산유국의 공급조정과 함께 신흥국을 중심으로 성장률이 회복되면서 에너지 수요가 늘어나 유가상승 가능성이 있음.
- 국제유가 상승은 수입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게 경제적 부담과 함께 소비 침체를 가져올 수 있음.

■ 한국경제 전망

- 2017년 한국경제는 지속적인 저성장 추세 속에서, 추가 하락 가능성도 있다

- 지속적인 성장 하락세 속에서 금리인하와 추경편성 등으로 지난해 경제를 지탱해 왔는데, 올해 2017년 한국경제 전망도 밝지 않을 것으로 내다봄.
- 그동안 한국경제 성장률은 1990년대 7%대에서 2000년대 5%, 2010년대 3%에서 현재 2%대로 계속 하락해 옴.
- 2017년 경제성장률은 2.2%~2.5%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음.
- 한국은행은 2017년 경제성장률을 지난해 10월 2.8%에서 올해 초 2.5%로 하향 조정함. 국책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4%, 민간경제연구기관 포스코경영연구원은 2.4%, 현대경제연구원 2.3%, LG경제연구원 2.2%로 전망.

- 최근에는 미국의 금리 인상과 함께 중국 위안화가 절상(10% 정도)되면 우리 경제 성장률은 1%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음.
- 2017년 경제상황에 대한 불안감은 사람들 심리 상태로 나타나고 있음. 올해 경제 상황이 ‘작년보다 더 안 좋아질 것’으로 보는 견해가 64.4%로, 1년 전(55.1%)과 6개월 전(56.2%)보다 비관적 전망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음.⁹⁾

- 2017년 한국경제는 안팎의 불안 요인 증대로 상당한 도전을 받을 전망이다

[내부적 요인]

- 인구구조의 변화
 - 저출산,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2017년부터 생산인구(15~64세)가 감소하고, 2018년에 고령사회 진입, 2020년 베이비부머의 노인세대 진입, 2026년 초고령사회 진입, 2031년부터는 총인구가 감소할 전망이다.
 - 상대적으로 소비성향이 높은 30-40대 인구가 감소하면서 생산과 소비 전반의 활력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 전통산업의 경쟁력 약화와 침체
 - 전자(삼성 갤럭시노트7의 조기단종), 자동차(현재 자동차 리콜과 판매부진), 건설(부동산 시장 침체), 조선-해운-철강의 구조조정 등 성장을 뒷받침해 온 전통 산업분야의 경쟁력 약화가 한국경제 전반의 침체에 영향을 주고 있음
 - 수출 제조업 가동률이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제조업 고용 감소와 함께 그 영향이 서비스업 등 다른 부문으로 확산.
-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서민경제의 불안정성 증대
 - 초저금리와 규제완화로 2016년 부동산 시장은 비교적 활성화되었음. 저금리에 따른 금융소득 감소로 부동산으로 유입되는 자금이 늘어나고, 재건축 등 아파트 건설이 활발히 이루어짐.
 - 하지만 규제완화와 저금리 정책으로 부동산 부양을 통해 경기를 회복하려는 개발주의 시대 방식은 한계에 이름. 올해는 공급 과잉과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 등으로 부동산 경

9) 현대경제연구원, 2017, “경제행복지수 5년 만에 최저치”, <현안과 과제>. 17-1호.

기는 전반적으로 하락할 전망이다.

- ▶ 가계부채의 절반 이상이 부동산과 연결된 상황에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본격화되면 가계의 이자부담은 커지고 부동산 시장은 물론 가계경제 전반이 침체될 가능성이 높음. 특히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는 상황에서(자가 점유율은 55% 수준)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완공되는 시점을 맞아 금리인상에 따른 잔금 미납과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 부동산 가격 폭등은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키우게 되고, 반대로 부동산 가격 하락은 소득 없이 부동산 임대 수익(월세 전환 등)에 의존하는 고령층 가구의 생활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음.
- ▶ 한국의 가계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70%가 넘어 세계 최고수준인 상황에서, 자원의 흐름을 왜곡하고 투기와 자산 양극화로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함.

[외부적 요인]: G2 국가인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에 따른 한국경제의 불확실성 증대

- 힘을 앞세운 미중 강대국간 패권 다툼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구체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 ▶ 미국 트럼프 정부는 ‘미국 우선주의’ America First를 내세워 중국을 ‘일자리 도둑’으로 비난하고,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등 무역 보복 조치에 나설 전망이다.
- ▶ 반면, 중국 시진핑 정부는 ‘중국의 꿈’ 中國夢을 이야기하며 세계1위 강자로 도약하기 위해 미국의 중국 견제 움직임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으로 보임.
- 미국과 중국 모두에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미중간 갈등이 경제는 물론 정치, 군사, 외교 등 전반으로 확산됨에 따른 영향을 ‘샌드위치’ 상황에서 상당 정도로 받을 전망이다.
- ▶ 대미, 대중 수출 전반이 위축될 뿐만 아니라, 미국의 한미FTA 재협상 요구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요구도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음.
- ▶ 고고도미사일방어 사드THAAD 체계 도입을 둘러싸고 중국의 제제가 구체화될 경우, 우리나라 경제와 문화 전반의 침체를 가중시킬 수 있음. 이미 한류를 금지하는 ‘한한령’ 限韓令의 영향으로 문화교류 중단, 관광객(유커) 감소가 나타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한국산 제품 불매운동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음.

- 문제는 미-중간 갈등의 외부 요인이 남-남 갈등이라는 내부적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사회적 불안감이 경제 영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음.

- 시민들 생활과 밀접한 경제 영역의 어려움이 주요 지표로 확인되고 있다

- 빠르게 늘어나는 가계부채 문제
 - 가계부채가 2014년 1,085조, 2015년 1,207조에서 2016년 말 1,300조 원(가구당 6,655만 원)으로 빠르게 늘어났으며, 2017년 가계부채는 전년 대비 9.8% 증가한 1,46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2016년 말 현재 가구당 보유자산(3억6187만원)은 전년보다 4.3% 늘어난 반면, 가구당 평균 부채(6,655만원)는 6.4% 증가해, 자산증가보다 부채증가 속도가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남.
 - 장기간 저금리 기조 속에¹⁰⁾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크게 증가해, 가계부채의 50% 이상을 주택담보 대출이 차지함.
 - 이와 함께 가계소득 부진에 따른 생활비 대출 수요가 크게 늘어난 점도 가계부채 증가의 요인이 되고 있음.
 - ‘한계가구’¹¹⁾가 전체 금융부채 보유가구의 12.5%로 전체 금융부채 금액의 29.1%를 차지해, 향후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경우 서민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 양과 질 모두에서 후퇴하고 있는 노동과 일자리 문제
 - 정부의 일자리 대책에도 불구하고 질 낮은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가 양산되고 있음. 비정규직 비율은 2015년 기준 전체 임금근로자의 32%로, OECD 국가 평균의 2배가 넘음.
 - 실업률도 2015년 3.6%, 2016년 3.7%에서 2017년 4.1%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청년실업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함. 취업준비생 등을 포함한 청년 체감 실업률이 22%를 넘고, 인턴, 비정규직까지 포함하면 34% 수준으로 청년 3명 중 1명이 실업 상태로 나타남.
- 생계형 자영업의 열악한 현실

10) 2016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1.25%로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어서 가계의 차입 비용이 크게 감소함.

11) 순금융자산이 (-)이고,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비율이 40%를 넘는 곳을 말함.

-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와 조기 퇴직, 높은 실업률 등으로 생계를 위해 자영업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음. 전체 근로자 중 자영업자 비율이 OECD 국가들(평균 16%)에 비해 우리나라는 약 27%로 매우 높음.
- 하지만 영세한 생계형 자영업자가 전체 자영업자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자영업자의 1/3은 대출로 사업자금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영업 폐업률은 지난 10년간 75%에 달할 정도로 생존 가능성이 매우 낮음. 특히 영세 자영업자 수가 많아 창업 후 3년 안에 폐업 비율이 47%에 달함.
- 양극화 확대와 취약한 복지체계
 - 소득 불평등 확대에 따른 소비력 저하가 경기침체로 이어지는 가운데, 부의 불평등이 건강과 교육을 포함한 생활 불평등으로 확산되고, 자녀 세대로까지 이어지고 있음.
 - 저성장과 국가부채 급증 등 재정적 한계로 복지에 대한 요구를 국가가 해결할 능력이 점점 약해지고 있어 사회적 갈등과 불신이 높아지는 요인이 되고 있음.

- 고령화와 함께 1인가구, 맞벌이 가구 증가로 ‘돌봄’이 중요한 사회 의제가 되었다

- 1인가구 증가는 개인의 개성과 자율, 창의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활력을 주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양극화의 확대와 함께 돌봄의 필요성을 높이고 있음.
 - 1인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45.5%로 전체 평균(13.8%)의 3배가 넘음.
- 특히 고령화와 함께 독거노인의 돌봄 문제가 커지고 있음.
 - 전체가구 중 독거노인 가구 비율은 2000년 3.7%에서 2010년 6%로 증가했으며, 2020년 8.0%, 2030년 11.8%로 증가할 전망이다.
 -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9.6%로 OECD 국가 평균(12.6%)의 4배 수준인데, 노후의 삶과 밀접한 사회보장 체계 미비로 고령화에 따른 부담과 고통이 상대적으로 매우 큰 편임.
- 맞벌이 가구 증가로 ‘시간빈곤’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현실도 돌봄 문제를 사회적 과제로 등장시키고 있음.
 - 유배우 가구 약 1,200만 중 맞벌이 가구가 약 500만 가구로 40%가 넘음. 미혼, 이혼, 사별 등의 이유로 여성 가구주도 계속 증가하고 있음. (1980년 14.7%에서 2010년 25.9%)
 - 가족의 해체와 가족부양 의식이 약화되는 가운데, 가족이 기존에 담당해오던 보육, 간

병 등의 돌봄 역할이 사회적 과제로 등장함.

- 가족단위 혈연관계를 넘어선 새로운 공동체적 관계를 통해 따뜻한 돌봄의 관계망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중요함.

- 저성장 시대에 맞는 체질개선 노력으로 새로운 생존 전략을 마련할 때다

- 지금의 저성장 상황은 극복 가능한 일시적 이상 현상이 아니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인식과 실천의 전환을 통해 대응책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
- IMF가 급성질환이라면 지금의 저성장 상황은 원인 파악이 어렵고 치유방법도 복잡한 만성질환에 가까움.
- 저성장 문제가 성장을 위한 노력의 부족으로 발생했다기보다는 온 힘을 다해 성장에 매진해도 예전과 같은 성장을 이룰 수 없다는 현실 인식이 중요.
- 인위적 부양으로 성장을 끌어올리기보다 구조개혁과 체질 개선을 통해 내실을 다지는 노력이 중요.
- 지금의 문제는 영양결핍보다 영양과잉에 따른 것으로, 성장형 경제의 체질을 바꿔내기 위한 정신적, 물질적 다이어트^{diet} 노력이 필요함.
- 욕망과 유혹에 빠지지 않고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공복감을 이겨내고 고통을 함께 나누는 인내의 과정이 중요함.
- 불안정한 소득 환경에서 살아가기 위한 방법으로 ‘협동’과 ‘공동체’의 가치로 서로가 가진 시간과 재능, 자원을 나누면서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나갈 필요

-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 소득수준이나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해 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권을 보장하는 기본소득 제도가 주목받고 있음.
- 약 한 세대 동안 일부의 급진적 주장으로 인식되어 온 기본소득 논의가 현재 선진국과 개도국, 진보와 보수를 아울러 폭넓게 논의되고 일부 적용되고 있음.
-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시작되어, 1970년대와 1980년대 서유럽 선진국을 거쳐 라틴 아메리카,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로 확산되어 옴.
- 브라질은 국가가 국민들의 기본소득의 권리를 처음 인정한 나라임. 미국 알래스카 주는 석유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거주민들에게 매년 일정한 배당을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 유럽연합은 빈곤 문제 해결과 포용적인 사회Inclusive society를 위해 기본소득안을 다룬 바 있으며, 일본과 독일도 의회 차원에서 기본소득 논의가 다루어짐.
- 작년 6월 5일 스위스는 월 3백만 원의 기본소득 도입안을 국민투표에 부쳤으나 76.9% 반대로 부결된 바 있으며, 핀란드는 보조금이나 실업수당 받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월 70만 원의 기본소득 실험을 시작함.
- 기본소득은 저성장, 불평등, 기술혁신에 따른 일자리 불안과 복지 지출의 비효율성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음.
 - 저성장이 지속되는 시대에 기본소득은 양극화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고 최소한의 삶의 안전망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으며, 저성장에 따른 소비침체 속에서 기본소득이 소비력을 높여 내수를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음.
 - 한편, 우파 쪽에서는 정부주도의 복지 비효율성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기본소득에 주목하고 있으며, 알파고 같은 인공지능 발달과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는 상황에서 기본소득이 생존형 노동을 넘어 삶의 질을 실현하는 주요한 수단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논의의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으나, 사회, 경제적 상황의 변화 속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음.
 - 2010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본소득 의제를 확산하고자 기본소득연합을 발족한 바 있으며, 2012년 2월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BIYN)가 발족됨. 정당으로는 녹색당이 기본소득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음.
 -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 (청년수당)¹²⁾과 성남시의 '청년배당 사업'¹³⁾ 시행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인 바 있으며, 농업·농민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농민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음. 이런 가운데 올해 대선 국면을 통해 기본소득 논의가 활발하게 다루어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음.

12)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29세의 '사회 밖 청년'(비구직 청년 NEET)들을 대상으로 일정한 소득조사(중위소득 60%이하)와 활동계획서 제출 등 일정한 심사를 통해 일정기간(2개월~6개월) 수급하는 제도.

13) 성남시에 3년 이상 거주한 19~24세의 노동가능인구로 분류되는 청년층에게 소득조사나 노동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지급한다는 점에서 기본소득의 취지에 부합하는 제도로 인식되고 있음. 특히 청년배당을 성남지역 내에서만 통용되는 지역화폐와 연계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본소득의 재원 및 경제적 효과, 지역소상공인의 공감대 확산 등에서 의미 있는 시도로 평가받고 있음.

- 생협 공제 관련 동향

- 공정위는 생협 전국협의회와 공제 TFT를 구성하여 공제 관련 규정을 작년 12월까지 작성하여 제안하기로 하였음.
- 생협 연합회는 각 연합회별 고유 특성에 맞게 공제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해 왔으나, 지난 2월에 발표한 공제사업 관련 규정에서는 생협전국협의회만 공제를 할 수 있도록 함. 현행 생협법의 규정만으로는 공제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 등의 방지가 어렵고, 안정적인 공제사업 시행이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임.
- 생협법상 생협은 의료생협까지 포함하면 666개, 구매 생협은 197개임. 공정위는 생협법을 개정하여 보건·의료조합과 그 외의 생협을 구분하여 각각 회원조합 1/2 이상의 동의로 전국연합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현재 일반 소비자들에 대해 공제 가입을 허용하는 공제조직으로는 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 3개 기관이 있으며, 이들 조직 또한 중앙회만 공제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공정위는 위 내용을 포함한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8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
- 한편 생협전국협의회는 현재의 공정위에서 기재부로 관할기관을 이동하는 방안을 국회의원들과 함께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관할기관 이동 후 공제 관련 규정 개정을 요구할 계획임.

- 협동조합 관련 동향

- 기재부에서는 지난 1월 ‘협동조합 내실화를 통한 건강한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이라는 목표를 담은 ‘제2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2017년-2019년)을 발표함.
 - 이번 계획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협동조합의 자생력 강화를 강조하고 있으며, ‘자생력 제고’, ‘고용 친화적 분야 확대’, ‘네트워크 강화’, ‘인식 개선’ 등을 4대 핵심전략으로 내세우고 있음.
- 기재부에 따르면 협동조합기본법 시행(2012년)과 1차 기본계획 수립(2013) 이후 현재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협동조합이 빠르게 성장해왔으며, 일자리 창출 및 지역

사회 기여 등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협동조합 설립 현황> (2016년 말 기준)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누계
일반협동조합	51	3,028	2,674	2,273	1,953	9,979
사회적협동조합	1	102	121	178	202	604
일반협동조합연합회	-	14	17	13	8	52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1	1	2	1	5
전체	52	3,145	2,813	2,466	2,164	10,640

- 평균 종사자는 2013년 7.1명에서 2015년 8.2명으로 증가했으며, 평균 이직률은 영리 회사의 22.3%에 비해 4.8%으로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협동조합 중 49%가 지역사회에 자원봉사, 물품 및 현금 기부 등 지역사회 기여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2014년 1년간 사회공헌 활동 금액을 환산하면 약 90억 원으로 집계됨.
- 그러나 수익모델 미비 등으로 운영되지 않는 협동조합 또한 다수 존재하는 실정으로, 설립 협동조합 중 44.5%가 휴·폐업 상태로 확인됨. (2015년 협동조합 실태조사)
- 한편,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는 지난 2월 8일 총회를 열어 올 대선에 적극적인 정책제안을 할 것을 밝히고, 단체명을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로 변경함. 또한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을 위한 노력도 진행할 계획임.

- 2017년 세계 곡물생산량과 곡물가는 상대적으로 안정 기조를 보일 전망이다
 - 세계 곡물생산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해 세계 곡물시장이 공급 과잉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당분간은 곡물가격의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봄.
 - 미 농무부(USDA, 2016년 11월)에 따르면, 2016/17년도 세계 곡물 생산량(25억 4,816억 톤)이 소비량(25억 2,941억 톤)을 약 1,875만 톤 초과할 것으로 전망.
 - 곡물 재고량이 전년대비 3.1% 증가한 6억 2,143만 톤으로, 재고율이 24.6%가 될 것으로 전망.
 - 다만 예측 불가능한 기상변동이 세계 곡물생산과 가격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음.

- 2016년 어려운 한 해를 보낸 한국 농업의 2017년 전망은 여전히 밝지 않다

- 농업 전망을 불투명하게 하는 대내외적 요인들¹⁴⁾

[외적 요인]

- 생산 및 수급불안정: 폭설, 폭염, 태풍 등 이상기후 확대, 조류독감, 구제역 등 가축질병 확산, 세계경제 위기 및 정치적 불안정 등.
- 가격 불안정: 투기자본의 개입과 국제 곡물가격 변동 등.

[내적 요인]

- 농산물 소비 위축: 농산물시장 개방에 따른 수입농산물(특히 수입과일) 증가, 경기침체와 청탁금지법의 영향 등으로 인한 국산 농축산물 소비 감소, 소비자 식생활의 서구화와 쌀 소비 감소.¹⁵⁾
- 농가 소득 감소: 저물가 속에서 농축산물 실질가격 하락, 농업노동에서 고용노동력 비중 증가로 농가경영비 상승, 국제유가(油價) 상승에 따른 농업 투입비용 증가 등.

1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7, <농업전망 2017(Ⅰ)>, 제20회 농업전망 자료집을 참조해서 재정리.

15)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1995년 106.5kg에서 2014년 65.1kg으로 줄었고, 2024년에는 51kg으로 더 줄어듦으로 전망.

- 농업 생산 기반의 불안정: 농업인구 급감(가축농, 소농의 위기), 농업종사자의 고령화와 양극화 심화, 농지 소실과 농산물 재배면적 감소, 육식문화 확산에 따른 공장식 축산과 가축질병 확산, 수입 원재료에 의존한 식품가공산업의 구조 등.

- 안정적인 식량자급을 위한 농업의 역할에 비해 국내 농업의 지속가능성은 점점 약해지고 있다

- 향후 세계경제와 기후의 급격한 변화로 식량수급이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높아,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통한 식량 자급이 삶의 자립을 위한 핵심 요소가 될 전망이다.
- 하지만 연간 1,500만 톤 이상의 양곡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식량자급 기반이 특히 취약해 농업의 위기가 곧 사회 전체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음.
- 국민들은 농업·농촌이 우리 사회에 기여한 긍정적인 역할을 높게 평가하고 있으나, 농업·농촌의 현실적 여건은 나아지지 않고 있음.
- 농업·농촌에 대한 2016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¹⁶⁾ 우리 사회에 농업·농촌이 가지는 긍정적인 역할이 큼에도 불구하고, 과거보다 현재, 미래로 갈수록 기대 인식과 현실적 여건은 점차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남.¹⁷⁾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농촌은 과거 우리 사회를 지탱해 온 근간(79.3%) · 농업·농촌은 현재 우리 생활 전반에 중요한 역할 담당(65.9%) · 농업·농촌은 우리나라의 새로운 미래성장 동력 가능성(54.9%) · 농업·농촌은 소중하고 살아볼 만한 곳(52.9%) · 우리나라 농업은 과거에 비해 나아지고 있음(48.3%) |
|--|

- 농업의 중요성에 비해 국내 농업의 지속가능성 기반은 점점 약해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함.
- 곡물자급률 감소: 곡물류 자급률(사료용 제외)은 2000년 55.6%에서 2016년 48.4%로 감소했고, 2017년에는 45.6%, 2021년에는 41.6%, 2026년에는 40%로 더 감소할 전망이다.¹⁸⁾

16)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농업인과 도시민을 대상으로 매년 의식조사 실시, 이번 조사는 2016년 10~11월에 도시민 1,500명, 농업인 1,090명 대상으로 실시.

17) 김동원·박혜진, 2016, “농업·농촌에 대한 2016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제139호 (2016. 12. 30), 2쪽.

- 농가인구 감소: 농가인구는 1996년 469만 명에서 2015년 257만 명으로 연간 3.1%씩 감소했으며, 2016년에는 전년대비 2% 감소한 252만 명으로 추정. 2026년까지 연평균 2.2% 감소해 전체인구 중 농가인구 비중은 3.8%인 약 200만 명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
- 농가호수 감소: 농가호수는 1996년 148만 호에서 2015년 109만 호로 연간 1.6%씩 감소했으며, 2016년에는 전년대비 1.6% 감소해 107만 호로 추정. 2026년까지 연평균 1.1% 감소해 1백만 이하(96만 호)로 감소할 전망.
- 고령농의 증가: 농촌 고령화의 빠른 증가로 65세 이상 고령농 비율이 2016년 39.3%에 이르러 일본(2013년, 36.1%)보다 높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나타남. 2026년에는 고령농이 절반 수준(49.3%)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영농후계자 감소: 농사를 이어갈 영농 후계자가 1995년 13.1%에서 2015년 9.8%로 줄어들어, 후계자 대책이 없으면 농업 재생산이 불투명한 상황임.
- 농촌인구 증가: 농가인구의 감소 추세 속에 귀농·귀촌자 유입으로 농촌인구는 조금씩 증가 할 것으로 보임. 2011년 귀농 가구 수가 1만을 넘었고, 2016년에는 전년 대비 11.2% 증가함.

- 농산물 개방의 확대 속에 국내산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는 여전히 높은 편이다

- 2016년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¹⁹⁾ 응답자 2/3는 수입산에 비해 국내산 농산물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품질 우수성 고려해 구입(38.5%) > 수입산에 비해 가격 비싸도 국산농산물 구입(32.8%) > 국산농산물 가격이 더 비싸면 수입 농산물 구입(28.7%)

- 2016년 조사 결과는 전년도에 비해 ‘가격이 비싸도 국산농산물을 구입하겠다’는 의견이 11.8% 증가한 반면, ‘가격이 비싸면 수입농산물 구입하겠다’는 응답은 10.6% 줄어들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국산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긍

1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7, <농업전망 2017(Ⅰ)>, 제20회 농업전망 자료집.

19) 김동원·박혜진, 2016, “농업·농촌에 대한 2016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제139호 (2016. 12. 30), 13쪽.

정적인 인식 변화를 확인할 수 있음.

- 그 배경에는 국산농산물에 대한 애국심과 같은 가치의 측면보다는 수입산에 비해 국내산이 가지는 질적인 우수성(특히 안전성)을 소비자들이 높게 평가한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임.

국산 농산물이 수입산보다 훨씬 안전하다(66.9%) > 국산과 수입산의 안전성에 큰 차이 없다(21.7%) > 수입산이 국산보다 안전하다(2.8%)

- 따라서 농업 개방화의 파고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국내산 농산물의 안전성과 품질을 높이기 위한 생산자들의 노력과 함께, 소비자들에게 수입산과 국내산의 품질 비교 정보를 상세히 안내하고,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뒤따라야 할 것임.
- 국산농산물의 질적 차별성을 높이는 노력이 뒤따르지 않으면 경기 침체 속에서 가격 민감도가 높아진 소비자들의 구매가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높은 수입산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음.
- 이런 가운데 친환경농산물의 생산량과 거래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어, 친환경농산물 시장의 경쟁도 격화될 것으로 전망됨.
 - 전체 경지면적에서 친환경농산물(유기, 무농약)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7.3%에서 이후 인증의 신뢰성 문제 등으로 축소되어 2015년 4.5%에 이르렀으나 앞으로 제도개선과 소비자들의 이용증대 등으로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 2017년 친환경농산물 거래규모는 1조 5,411억 원, 2020년에는 2조 5,242억 원, 2025년에는 3조 9,862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²⁰⁾ 경기침체 속에서도 친환경농산물 시장의 경쟁은 높아질 것으로 보임. 생협과 농협, 지자체는 물론 대형 유통업체와 온라인 전문기업이 친환경농산물 유통 시장에 뛰어들고 있음.

– 경기침체 속에 1인가구와 맞벌이 가구 증가로 소비생활과 먹거리 이용 패턴이 변하고 있다

- 저성장으로 소득 증가가 어려운 상황에서 ‘불황형 소비행태’(CORE)가 확대되고 있음.²¹⁾

20) 정학균·이혜진·김창길, 2016, “2016 국내외 친환경농산물 생산실태 및 시장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제131호(2016. 8. 2)

- 소형화(Compact): 1인가구 맞춤형 소형 제품에 대한 선호. (식료품, 생활용품, 가전 등)
- 소비자 간 협동(Organized): 소비자의 영향력 확대와 함께,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가격, 사용 후기 등 정보를 소비자들 간에 빠르게 공유하면서 구매를 결정.
- 지출 감축(Reducing): 저가형 제품 선호, 공동구매(해외 직구 포함)와 소셜커머스 등을 통한 지출 감축 노력.
- 경제성(Economical): 가전제품, 유아용품 등의 렌탈 서비스 활성화, B급 상품 활성화, 가성비를 고려한 합리적 소비행위 증대(노브랜드, 원플러스원 물품), 공유경제 활성화.
- 1인가구 증가로 가족 중심의 밥상공동체가 무너지고 ‘나홀로 먹기’ (혼밥, 個食, 孤食)가 확산되는 가운데, ‘이웃과 함께 먹기’ 활동(소셜다이닝, 밥상공동체운동)도 새롭게 등장.
- 1인가구가 2000년 226만(전체가구에서 15.6%)에서 2015년 506만(26.5%)으로 늘어났으며, 이런 현상은 지속되어 2035년에는 763만 가구(34.3%)가 될 것으로 전망.
- 가정간편식(즉석, 동결식품), 반조리식품, 손쉬운 레시피, 소포장 식품 소비 증가.
- 맞벌이 가구 증가로 시간과 에너지 절약형 물품 이용 방식이 발달.
 - 인터넷모바일 쇼핑물과 편의점 이용률은 증가하는 반면, 대형마트 이용률은 감소 추세.
 - 특히 편의점이 저렴하게 한끼 해결하는 공간으로 진화하면서 식품소비 트렌드를 주도 (신제품의 테스트베드 역할, 편의점 PB상품 개발, QR코드로 생산과정 동영상으로 공개(CU짜장밥), 특히 편의점의 도시락 전쟁 심화. (CU-백종원 한판도시락, GS25-김혜자 도시락, 세븐일레븐-혜리 도시락 등)
- 한편, 저성장 상황에서 구매를 확대하기 위해 ‘저가 전략’으로 갈 것인지, 상품의 질적 가치를 높이는 ‘프리미엄 전략’으로 갈 것인지 선택이 필요한 시점임.
- 생협외의 경우 친환경농산물 소비에 있어 물품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과, ‘가격’이 물품 이용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음.

〈친환경농산물 및 유기가공식품의 구입에 대한 의견〉

21) 현대경제연구원, 2017, “2017년 국내 10대 트렌드”, <경제주평>, 17-1호, 16-17쪽.

구분	내용
구입 이유	안심하고 먹을 수 있어서(81.2%) > 가족 건강을 위해서(65.3%) > 친환경농산물 을 신뢰해서(27.3%) > 환경보호를 위해서(20.4%) > 일반농산물 보다 품질 이 좋아서(10.0%), 맛이 좋아서(10.0%)
구입 않는 이유	가격이 비싸서(75.2%) > 일반농산물과 품질 차이가 없어서(25.8%) >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23.5%) > 관심이 없어서(13.4%) > 물품이 없 어서(10.5%) > 먹을 사람이 없어서(4.9%) > 믿을 수 없어서(1.6%)

자료: 농식품부, 2017, 「친환경농식품 소비자 태도조사 결과」 발표 자료 재정리(2.1.)²²⁾

- 한편, 일반식품에 비해 친환경식품의 구입 장소로 친환경식품전문점의 비중이 상대
적으로 높고, 구입 장소 선택의 이유로 판매처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작용하는 것
으로 확인되어,²³⁾ 조직화된 소비자 기반을 둔 생협의 조합원 조직과의 신뢰 유지
노력이 물품 이용률 향상과 깊이 연결될 가능성이 높음.

〈일반식품과 친환경식품의 구입 행태에 대한 의견〉

구분		내용
일반식품	구입 장소	대형 할인점(33.6%) > 동네 중소형 슈퍼마켓(31.3%) > 재 래시장(24.6%) > 대기업운영 중소형 슈퍼마켓(8.6%)
	장소 선택 이유	거리가 가깝거나 교통이 편리(35.5%) > 품질(21.4%), 가격 (21.4%) > 다양한 상품(16.6%)
친환경식품	구입 장소	대형 할인점(42.1%) > 친환경식품 전문점(20.0%) > 동네 중소형 슈퍼마켓(12.4%) > 대기업 운영 중소형 슈퍼마켓 (11.1%) > 재래시장(7.4%)
	장소 선택 이유	품질(31.5%) > 구입처에 대한 신뢰(23.3%) > 교통 편리 (11.9%) > 다양한 상품(10.6%) > 가격(10.5%)

- 반면에 상대적으로 젊고, 교육과 소득수준이 높고, 1인가구일수록 이용의 편의성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만큼, 편의물품 개발과 함께 매장 개장 시간 및 요일 확대, 매

22) 전국 17개 시·도, 만 25세 이상의 여성(1,200명)을 대상으로 웹패널을 활용한 온라인 조사 실시
(2016.12월),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pm 2.83\%$.

23) 김상호, 2016, “가구 내 식품 구입 및 소비행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6 식품소비행태조사 결과
발표회> 자료집(12. 9), 28-29쪽.

장배달 등으로 이용 편리성을 높이고, 홍보를 비롯한 정보전달 방식도 맞춤형으로 바뀌어나갈 필요가 있음.

– ‘건강’과 ‘먹거리’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으나, 생활양식의 변화로 나아가지는 못하고 있다

- 방송 매체와 SNS 발달로 음식이 중요한 소비 콘텐츠로 다루어지고, 먹거리에 대한 적극적인 소비 행위도 나타나고 있음.
- 2001년부터 2016년 사이 15년 동안 요리정보에 대한 관심이 35.9%에서 48.9%로 높아졌고, 맛집을 찾아다니는 적극적인 소비행위도 40.7%에서 48.0%로 증가. 먹는 데 돈을 아끼지 않는다는 의견도 43.5%에서 52.0%로 증가함.
- 모바일을 통해 맛집 추천 위치기반 서비스가 제공되고(식신, 메뉴판, 망고플레이트 등), 음식을 콘텐츠로 한 먹방, 쿡방, SNS에 음식사진 올리기 등이 활발하게 나타남. 그 배경에는 정신적 허기와 스트레스를 먹는 행위를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도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됨.
- 지난 15년 동안 소비자 인식의 변화를 보면, 건강식품 애용률은 높아진 반면 식생활 습관은 나아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²⁴⁾
- 15년 전에 비해 ‘건강식품’ 애용률은 27.5%에서 40.2%로 크게 증가함. 하지만 건강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에 비해 인스턴트 식품, 간식 등에 대한 선호도도 높아져 식생활 습관은 건강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됨.
- 식생활의 불균형화로 비만, 만성질환, 면역력 저하 등 생활습관병이 증대되면서, 무첨가 무농약 신선식품과 다이어트용 슈퍼푸드 이용과 설탕과 나트륨 줄이기 등의 식단 조절 등 건강 지키기 노력이 강조되고 있음.
- 한편, 건강에 대한 관심이 먹거리를 넘어 생활속 제품과 생활환경 문제로 확장되고 있음.
- 가습기살균제 사태 이후 화학제품의 위해성(삼푸, 치약, 바디워시, 물티슈 등)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되면서, 먹고, 입고, 바르는 생활 속 제품의 건강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24) 최인수 외, 2016, <2017 대한민국 트렌드>, 한국경제신문, 22-24쪽.

- ▶ 그 영향으로 생협의 천연, 친환경제품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한편에서는 해당 수입 제품 소비와 함께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활동(Maker, DIY 등)도 활발해지고 있음.
- ▶ 또한 GMO와 나노(nano) 제품의 위해성은 물론 생활 방사능 문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전망이다.

– 트럼프 정부의 보호주의 강화 조치는 한국 농업에 다양한 형태로 영향을 줄 전망이다

- 지난 50년간의 규제철폐와 무역자유화를 지향해 온 신자유주의 국제무역질서가 세계경제 침체 속에서 도전을 받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에 따른 보호주의 강화가 한국 농업에 다양한 영향을 줄 전망이다.
- ▶ 트럼프 정부는 미국 농민의 권익을 우선하는 차원에서 자국 농업노동자 보호를 위해 외국 노동력 유입을 제한하고, 동물보호와 GMO 표시제 등에 대해서도 반대 조치를 취할 전망이다.
- ▶ 미국의 TPP 탈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우리나라의 TPP 가입으로 인한 농업 피해 가능성은 줄어들 가능성도 있음.
- ▶ 또한 기존 한미FTA의 폐지 또는 재협상이 이루어질 경우, 미국산 농식품 수입에 따른 국내 농업의 피해가 줄어들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한미FTA 재협상이 미국 농산물 추가 개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음.
- 미국의 대중 압박으로 중국 위안화가 절상될 경우 중국산 농식품 가격이 상승해 중국 농산물 수입이 줄어들게 되면 국내 농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나, 동시에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통상압력이 거세져 세계경제는 물론 국내 경제가 침체될 경우 국내 농산물 소비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음.

- 한반도를 둘러싼 혼란스러운 국제정세 속에서 정치적 리더십의 공백이 우려된다

· ‘국익 우선’을 앞세운 미국과 중국이 세력 대결을 펼치는 가운데,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정세가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가고 있음.

·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 중국과 미국이 힘으로 개입하면서 군사적 긴장상태가 고조되고 이것이 동북아 지역의 안보 불안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한국의 사드 배치와 북핵 문제 해법 등을 놓고 미국과 중국의 입장 대결이 확대될 전망이다.

· 특히 북한이 핵무기를 앞세운 공격 협박을 공공연히 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는 오바마 정부의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가 실패했다고 보고 대북 강경기조를 천명하고 있음.

· 이런 가운데 박근혜 정부는 북한 지도부 제거 특수임무를 띤 부대를 창설해 ‘선제타격’, ‘정밀타격’을 논하고 있고, 극우 세력은 대북 강경 대응을 촉구하고 있어, 한반도 전쟁에 대한 위기감까지 커지고 있음.

· 숙청을 통한 공포정치를 통해 권력 장악에 자신감을 드러낸 김정은 정권의 돌출 행동이 우려되는 가운데, 한국은 탄핵과 대선 국면 속에서 정치적 리더십의 공백 상태와 그 후유증이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 영구 임기가 보장된 북한 최고 권력자 김정은은 권력 장악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인민 생활과 직결된 먹는 문제 해결과 생필품의 원활한 조달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그 차원에서 2017년부터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

· 하지만 핵무기 개발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등으로 외교적 협상력을 높여서 북미관계 개선 등을 통해 경제적 출구를 찾으려는 북한의 전략은 오히려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을 초래하고 있으며, 특히 트럼프 정부의 대북 강경 노선으로 향후 전망이 매우 불투명하게 되었음.

· 여기에다 북한은 자원 수출로 외화를 벌여²⁵⁾ 농업과 경공업 분야에 투자해 왔는데, 주요 수출대상국인 중국이 내수 중심으로 경제정책을 바꿈으로써 그 영향을 많이 받게 되

었고, 최근에는 중국 정부가 대북제재 차원에서 북한산 석탄 수입을 연말까지 전면 중단하는 방침을 발표해 북한의 경제적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임.

- ▶ 북한 김정은 정권으로서는 딜레마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정치, 군사, 외교적 수단을 찾으려 하나 신뢰할 만한 대화의 상대가 없는 상태임. 김정은은 연초 신년사를 통해 2017년이 7.4남북공동성명 45주년과 10.4선언 10주년을 강조하며 남북관계 개선을 주장한 바 있으나, 대선 결과에 따라 방향이 전혀 달라질 수 있으며, 미국의 대북 정책과 이념적 지형에 따른 남북 갈등도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 ▶ 한편,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서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해 일본, 러시아와 손잡고, 중국은 이에 대응해 북한과의 관계를 밀착해 갈 때, 한국 정부의 외교적 입지는 매우 좁아질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 상태를 수습할 외교적 컨트롤 타워는 국내정치 상황으로 상당기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탄핵을 넘어 탈핵 사회로 전환이 필요하다

- 원전 밀집도가 세계 1위인 우리나라에서 잇따른 지진 발생으로 원전에 대한 불안감이 크게 높아지고 있음.
- ▶ 한국의 원전 밀집도(0.240)는 세계적으로 원전을 가장 많이 운영하고 있는 미국(0.011), 프랑스(0.120), 일본(0.111), 영국(0.043) 등과 비교해도 매우 높은 편임.
- ▶ 소위 ‘판도라의 상자’로 불리는 원전이 영광, 울진, 월성, 고리 4개 지역에 총 25기가 집중되어 있는 가운데, 경주를 비롯해 지진 발생 빈도가 최근 들어 크게 증가하고 있음.²⁵⁾
- ▶ 특히 고리와 월성 원전부지 반경 30km 이내에 약 4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음. 이는 후쿠시마 원전 부근 인구 수(약 17만 명)의 25배에 달함. 이런 가운데 현재 건설 중이거나 건설허가의 승인이 난 원전은 총 7기에 달함.
- 법원의 월성1호기 중단 결정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항소 움직임으로 탈핵 운동이 다시 활력을 띠고 있음.
- ▶ 지난 2월 7일 서울행정법원이 월성1호기 주변에 거주하는 경주 시민 등 2,167명이 원

25) 북한의 전체 수출에서 지하자원 수출이 약 1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짐.

26) 기상청은 작년 한해 국내에서 발생한 지진이 총 254회로, 예년(1999~2015년) 평균보다 5배가량 많았으며, 이중 작년 9월 경주 지진은 규모 5.8로 관측 이래 역대 최대 규모여서, 우리나라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을 확인시켜 줌.

안위를 상대로 낸 ‘월성 1호기 계속운전허가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림.

- 2015년 원안위가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결정을 내린 데 대해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을 중심으로 원고인단을 모집해 소송을 진행했으며, 그에 대해 법원이 ‘무효’ 판결을 내린 것임.
- 재판부는 원자력안전법령에 계속운전을 위한 안전성 평가시 최신 기술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이를 적용하지 않았으며, 심의·의결 과정에서도 허가사항 전반에 대한 변경내용 비교표가 제출되지 않는 등 적법한 심의·의결이 이뤄지지 않았음을 무효 판결의 사유로 밝힘.
- 월성1호기는 국내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원전으로, 2012년 11월에 30년 수명이 다해 가동이 중단되었으나 2015년 2월 원안위의 결정으로 재가동에 들어갔으며, 지난해 경주 지진 당시 가동이 중단되었으나 원안위원장 직권으로 재가동되기도 했음.
- 이번 사법부의 수명연장 처분 취소 판결은 국가 주도의 일방적인 원전 정책에 제동을 걸고 탈핵 사회로 나아가는데 있어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 준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하지만 원안위는 이 판결에 반발해 항소할 뜻을 밝히고 있고 최종 판결까지 가동 중단이 미뤄짐에 따라 국민소송원고단이 즉각적인 가동중단을 요구하는 ‘계속운전 허가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할 예정이며, 탈핵운동 단체들을 중심으로 원안위의 항소 포기를 촉구하는 시민행동을 전개하고 있음.
- 한편, 3.11 후쿠시마 6주기 행사와 다가올 대선을 앞두고 탈핵 의제를 공론화하려는 움직임도 일어나고 있음.
- 2017년에는 대선 외에도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3차 에너지기본계획 등 에너지 관련 주요 일정이 예정되어 있어, 2030년까지 탈핵에너지 전환을 목표로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정책 제안과 실천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임.
- 한살림에서도 3.11 후쿠시마 6주기 퍼레이드와 100만인 서명 운동을 진행할 예정임.

– 국민의 알권리와 건강 보호 취지를 살려 GMO 표시제를 재개정할 필요가 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2월 4일 식품위생법의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을 개정, 시행함에 따라 GMO 원료를 사용한 식품의 경우 이를 표시하도록 하였음.
- 그동안은 원재료 함량을 기준으로 5순위 안에 유전자변형 농산물이 들어있지 않으면 표시하지 않아도 되었던 데 비해서 이번에 표시기준을 다소 강화하고자 한 것임.

· 그러나 GMO 표시는 완화하면서 비유전자 변형식품(Non-GMO) 표시는 오히려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음.

· 표시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표시 대상은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과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 후에도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유전자변형식품’으로, 여전히 비의도적 혼입(3% 이하)에 한해 표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가공 후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당류, 유지류의 경우도 예외로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식용 GMO의 상당수가 사용되는 콩기름식용유와 카놀라유, 옥수수유, 면실유 등의 식용유가 모두 제외되며, 옥수수로 만들어진 액상 과당이 들어간 제품과 간장 또한 제외 대상이 됨. 식품 제조 시 미량으로 들어가는 부형제, 안정제, 희석제의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음.

·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Non-GMO와 GMO-free를 구분하지 않으며, Non-GMO나 GMO-free의 경우 표시대상 GMO 물품(현재 수입되는 콩, 옥수수, 감자, 카놀라(유채), 사탕무, 면화, 알팔파 등)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만 표기할 수 있음. 이 경우 표시대상 원재료 함량이 50% 이상이거나 1순위로 사용되어야 하며, 비의도적 혼입치는 인정되지 않음.

· 이에 GMO 반대 전국행동에서는 성명을 통해, ‘국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으며, 원재료에 GMO 원료가 사용되었을 경우 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유럽과 미국 등에서도 원료에 기반한 GMO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음.

· 또한 대다수 나라들은 Non-GMO 표시를 민간 자율 영역으로 두고 법규로는 규제하지 않고 있지만, 식약처는 Non-GMO 표시를 규제 대상으로 삼고 절차까지 까다롭게 해 개선이 필요함.

· 지난해 발의한 ‘GMO 완전표시제’ 법률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며, GMO의 위해성을 알리면서 자체적으로 Non-GMO 물품을 개발해 홍보해 온 한살림은 이번 식약처의 GMO 표시제 개정에 따라 사업과 활동에 제약을 받을 전망이다.

· 따라서 한살림은 민간 차원의 자율적 활동을 제약하는 정부의 조치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정부의 개정안에 대한 심의 요청 등을 통해 ‘원료기반 완전표시제’를 온전히 실현하고자 Non-GMO 관련 식약처 고시 철회와 개정을 위한 운동을 관련 단체들과 함께 전개할 계획임.

- 기후변화가 점점 심각해지는 가운데 세계 기후협약 시스템은 오히려 불안정해지고 있다

-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가 점점 확대되고 있음
 - 세계적으로 지진, 초강력 태풍 등 자연재해가 지난 한 해 총 750건이 발생해, 지난 10년 평균 590건보다 약 1.3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호주국립대학교(ANU) 연구팀은 최근 '인류세人類世 보고서'(Anthropocene Review)를 통해 인간으로 인해 지구의 기후변화가 자연 상태보다 170배나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함.
 - 국제식량정책연구기관IFPRI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노력이 없으면 식량안보 문제가 현실화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음. 기후변화로 2050년 국제 곡물생산량은 2000년 대비 옥수수는 24%, 밀은 3%, 쌀 11%, 감자 9%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²⁷⁾
- 하지만 세계 기후협약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세계 기후협약 시스템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음.
 - 트럼프는 당선 후 기후변화와 관련된 연방정부 예산을 삭감하고, 미국 중서부 송유관 건설 공사를 재개시키는 행정명령과 에너지 산업 규제완화의 의회결의에 서명함으로써 에너지 업계의 편을 들어줌.
 - 따라서 2015년에 세계 195개국이 참여한 파리 기후변화협정으로 마련한 '신기후新氣候 체제'가 트럼프의 대통령 취임 후 미국의 입장 변화로 인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음.
- 세계 7위 온실가스 배출국인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의 영향이 특히 큰 편이어서 적극적인 대응 노력이 필요함.
 - 지난 100년간 우리나라의 연평균 기온은 1.7도 상승해 지구 평균보다 2배 높은 수준을 보임. 현재 상태로는 2050년까지 2~4도 더 오를 전망이다.
 - 우리나라 기후는 2020년대에 남부지방이 아열대기후로 바뀌고, 2036년 이후에는 폭염 사망자가 지금의 2배로 늘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27) 임영아·정학균·이혜진, 2017, “기후스마트농업의 동향과 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전망 2017 (1)>, 제20회 농업전망 자료집, 183쪽.

- ▶ 또한 갈수록 심해지는 기후변화로 농작물 피해가 커지고 열대성 질병이 확산되면서 건강과 생명이 크게 위협받을 가능성이 높음.
- 하지만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의 대응 노력 미비로 국제사회로부터 ‘기후불량국가’로 지목받고 있음.
 - ▶ 2016년 11월 모로코에서 열린 제22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앞두고 ‘기후변화와 관련한 국제연구컨소시엄’(CAT)이 우리나라를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뉴질랜드와 함께 세계 4대 ‘기후불량국가’의 하나로 꼽음.
 - ▶ 우리나라의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의 급격한 증가, 석탄화력발전소 수출에 대한 재정지원,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폐기 등이 이런 판단의 이유로 작용함.
 - ▶ 정부는 기후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지난해 53기에서 2017년까지 64기로 늘리고, 2022년까지 추가로 9기를 더 건설할 계획을 밝히기도 함.

동향분석보고서

모심의 눈 살림의 길 제15호

펴낸이 황도근

펴낸날 2017년 2월 22일

펴낸곳 (사)모심과살림연구소

(06732) 서울 서초구 서운로 19, 3층

02-6931-3604 mosim@hansalim.or.kr

<http://mosim.or.kr>



동향분석 보고서
모심의 눈 살림의 길 제15호